

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장 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

시각예술 · 다원예술

7월 1일(화) 오후 2시, 4시 30분

1회 문학
6월 30일(월)

2회 시각예술 · 다원예술
7월 1일(화)

3회 연극 · 무용
7월 2일(수)

4회 음악 · 전통예술
7월 3일(목)

5회 국제문화예술교류
7월 4일(금)

6회 생활 속의 예술 · 문화복지
7월 7일(월)

7회 제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7월 11일(금)

차례

I. 시각예술	
• 발제	
- 시각예술 지원의 정책 환경과 개선방향 3	양지연(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어떻게 세워야 할까 12	오상길(작가,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 대표)
- 시각예술 지원에 따른 제안 18	장유호((사)한국미술협회 기획정책위원장)
- 세 가지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 창작지원 23	김성래(한국사립미술관협회 상임이사)
- 미술계 현황의 변화와 시각예술 지원정책 조정의 필요성 26	김윤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
-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는 지원정책 펼쳐야 32	이건수(월간미술 편집장)

II. 다원예술	
• 발제	
- 다원예술, 그 현황과 과제 37	이진아(2기 다원소위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 <다원예술, 그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48	장지영(국민일보 문화부 기자)
- <다원예술, 그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52	김성희(가네샤 프로덕션 대표)
- 다원예술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 54	김소연(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 연극평론가)
- 다원 예술 인큐베이팅에 대한 부정적 시선 58	류한길(the manual 대표)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주제 1: 시각예술	
* 사회: 김세준(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발제(각 20분)	
14:00~14:20	발제 : 양지연(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토론(각 10분씩)	
14:2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상길(작가,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 대표) - 장유호(사)한국미술협회 기획정책위원장) - 김성래(한국사립미술관협회 상임이사) - 김윤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 - 이건수(월간미술 편집장)
15:10~16:00	지정 및 자유토론
16:00~16:10	휴식
주제 2: 다원예술	
* 사회: 김세준(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발제(각 20분)	
16:30~16:50	발제 : 이진아(2기 다원소위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각 10분씩)	
16:5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지영(국민일보 문화부 기자) - 김성희(가네샤 프로덕션 대표) - 김소연(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 연극평론가) - 류한길(the manual 대표)
17:30~18:00	지정 및 자유토론
18:00	토론회 종료

시각 예술

발제

시각예술 지원의 정책 환경과 개선 방향

양 지 연(동덕여대 교수)

- 시각예술 정책의 의미
- 시각예술 환경: 문제점과 지향점
- 시각예술 지원정책 개선방향
 - 정책 사업 목표의 명확성, 적절성 제고
 - 창작과 매개, 비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 형성
 - 사업/개인 단위별 지원 위주에서 인프라와 제도적 환경 지원 강화 정책으로
 - 기금 공모 지원 사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직접 지원의 원칙과 방식 재고
 - 미술계 전문가(전공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정책 수요자인 국민 대중의 참여 강화
 - 국가(공공) 지원이 필요한 차별화된 영역을 도출하고 집중지원
 - 문화행정의 '문화화'

I. 시각예술 정책의 의미

원론적으로 공공정책은 정책 대상의 현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을 공적 수단(프로그램, 예산, 제도 등)을 통해 해결, 조정,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각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각예술 분야의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모습과 그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해도, 문제를 공적인 수단에만 의존하여 해결할 수는 없으며 모든 문제에 공공

정책이 개입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어떤 문제가 공적 개입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정책의 예기치 못한 긍정적/부정적 여파까지 세밀히 살피며 적절한 수단을 고안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조심스럽게 실행하면서 모니터링하여 원래의 목표, 즉 바람직한 상태로 나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은 현실과 지향에 대한 타당한 문제 인식만큼 중요하다.

본 발제문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에 따라 1) 현 시각예술 환경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검토해 보고 2)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적 개입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부분을 모색해보며, 3) 시각예술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시각예술 환경: 문제점과 지향점

최근 시각예술 환경의 두드러진 양상들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짚어 볼 수 있다.

1. 미술시장의 영향력 확대

최근 2-3년간 팽창하고 있는 미술시장의 파워는 시각예술의 창작, 매개, 유통, 소비의 전 영역에 있어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 유통 구조의 다변화, 거래 총액의 기하급수적 증가, 국제 아트페어와 경매에서의 판매 호조, 국내 화랑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등 미술시장의 성장은 외형적으로 창작, 매개, 소비의 동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시각예술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술시장이 비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영역, 이를 테면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 보존,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매개 기관, 비평가 출판, 큐레이팅과 전문인력, 미술교육 환경 등 보다 내재적인 환경에 있어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미술시장의 약진으로 인한 관심의 쏠림 현상이 기초 영역을 잠식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미술시장의 무조건적 활성화가 주요 현안이었던 시각예술 정책은 미술시장 성장의 이후와 이면을 살피면서 미술 생태계의 아젠다를 재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 상업적 기획 증가와 소비의 양극화

2000년 경 이후 국공립미술관 전시의 주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블록버스터 전시들은 대중적으로 소구력있는 주제를 갖고 보다 많은 관람객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명분으로 미술관 대중화의 불가피한 수단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블록버스터 전시 기획과 유통, 소비의 '한국적' 메커니즘이 미술의 대중화와 전문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대부분 외부 기획사가 전적으로 기획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과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 상품인 블록버스터 전시는 미술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타의 전시를 초라하게 보이는 역효과까지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서양 미술사조에 치우친 상투적인 테마와 스펙터클에 익숙해진 대중들의 미술취향과 선택권을 단조롭게 함으로써 미술 대중화의 명분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1만원을 상회하는 블록버스터 전시의 입장료는 미술 향유를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블록버스터 전시 자체가 아니라, 시각예술 문화의 첨단에서 비전과 역사성을 제시해야 할 국공립미술관들이 상업적 전시 유치/대관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게 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상업성과 대중성의 가치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창출해야 하는 미술계의 도전을 말해준다.

3. 기관과 사업의 양적 증가, 그러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변화

미술관/박물관, 화랑, 대안공간, 비엔날레,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계의 주요 제도 기관들의 양적 확대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 형태의 각종 군소 비엔날레들과 미술시장 영역에서 아트페어, 경매사들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시 등의 사업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 기금 지원의 증가가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시각예술 분야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역 공모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과 사업의 양적 확대 만큼의 질적, 구조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미술관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고, 전시 등 프로그램

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주목할 만한 전시는 그에 비례하지 않고,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역시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내실은 담보 상태이다. 문화향수 지표로 언급되는 전시 관람률 및 문화행사 참여율 역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각예술 정책과 지원의 효과가 진정으로 성취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4. 국제화의 보편화

시각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 해외 기관, 인력과의 협력 및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메이저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중소 규모의 기관/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국제적 네트워킹이 시각예술 분야에 총체적인 역량으로 축적되고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시각예술 지원 정책 개선 방향

1. 정책 사업 목표의 명확성, 적절성 제고

기금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정책 사업의 방향 및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절성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 많은 경우 수사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로 인해 지원사업 간 차별성이 부족하다. 또한 다중적인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모호하여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정책 사업 목표가 적절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부적절성과 모호성을 초래 하며 이는 정책 효과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된다. 한 사업에 복수의 정책 목표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설정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¹⁾

1) 예를 들어 미술은행의 경우 창작 지원, 문화향수 확대, 미술시장 활성화라는 3개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사실 각각 매우 상이하고 때로 상반될 수도 있는 목표로, 우선순위가 불분명한 목표는 사업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 한계를 가져오고 '모든 것이기를 바라나 이도저도 아닌' 결과로 나타난다. 더욱이 정책 목적과 성과 지표의 괴리를 초래한다. 미술은행의 문광부 자체 성과지표가 '대여율 증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의 부적합성을 보여준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초기에는 미술시장 활성화가 주요 목표일 수 있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목표를 재점검해야 한다. 미술은행을 예로 들었으나 정책(사업) 목표의 적절성과 구체성, 우선순위는 시각예술 정책과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창작과 매개, 비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 형성

시각예술 정책이 창작 지원은 창작 스튜디오 지원, 비평은 학술 및 보존 사업 지원, 매개 지원의 경우 전시 및 교육 사업 지원, 전문인력 지원은 인력 채용 및 배치 지원 등으로 지원 영역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제한이 있다. 각 영역별로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패러다임을 넘어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효과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창작 스튜디오 지원의 경우 공간 지원을 넘어 창작 행위를 질적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작가간 교류, 비평 및 큐레이팅과의 연계 등)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사업/개인 단위별 지원 위주에서 인프라와 제도적 환경 지원 강화 정책으로

공공 지원의 대상은 대부분 개별 사업이나 기관, 개인 단위로 이루어져있으며, 1회성의 직접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직접지원 형태의 확대만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향후 시각예술 인프라의 질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각예술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의해 미술관/박물관 학예사, 교육전문인력, 청년인턴, 박물관 해설사 등 다양한 인적자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단기 계약 '채용'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자기계발 및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 양성과 이들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최근에 도입된 문화예술 희소분야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공적 자금으로 양성된 이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기반이 취약하다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공 시각예술기관의 전문인력 직제와 규모, 처우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4. 기금 공모 지원 사업의 선순환적 구조 구축

현재 대부분의 기금 공모 지원 사업은 사업 공고 -> 공모 신청 -> 심사 및 선

정 -> 사업 진행 -> 사후 평가 -> 환류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에 지원 영역과 지원금 범위를 공고하여 공정하게 신청 기회를 주는 이러한 공모 사업은 절차상의 타당성을 지니나, 실제적인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각 과정이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공모 지원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원사업의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문화재단의 기금 공모지원 사업은 그 목적의 차별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지원신청과 심의에서 혼선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여러 지원사업간의 중복 신청이 발생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의 성격 역시 두루뭉술하게 설정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심사의 기준 역시 모호해 진다. 따라서 지원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 지원 범위, 신청자의 조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의 적절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는 일은 심사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조건이지만, 공모 사업 운영의 프로세스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지원 신청 사업을 단기간에 피상적인 서류심사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하다보니 근본적으로 심층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의한 심사가 어렵다. 심사자의 개인적 호불호와 정보에 좌우될 여지도 적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교한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계획의 구체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원심의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시 현재로서는 잘해야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평가로 인해 사업주체가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업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사업의 우수성을 촉진하거나 지원 사업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하위 평가 사업을 걸러내는 관례적인 행정절차로 기능하는 상황이다.

5. 직접 지원의 원칙과 방식 재고

직접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액다건식' 기금 배분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택과 집중 방식이 논의되나, 실질적인 운영 방향과 방식에 있어 미흡함이 있다. 선택과 집중은 단순히

보다 적은 사업에 많은 돈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도 기금 의존도를 높이고 객관성과 위화감의 문제를 수반함으로써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선택과 집중 원칙은 지원 사업의 목표와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원해야 할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선정, 발굴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 평가의 전문성 강화, 사업의 효과를 장기화 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모 사업의 기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각예술분야에서도 지원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원래의 계획이나 기준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사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예술상 등 시상 제도가 사후 지원의 역할을 일부 수행했으나, 시상 제도 외에 공모 사업의 지원금 지원을 사전, 사후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후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후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후 지원은 모든 일반 공모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년간 지원사업에 적용할 경우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미술계 전문가(전공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정책 수요자인 국민 대중의 참여 강화

대부분의 공모 지원 사업의 심의 및 평가 기준에는 최종적 수요자인 향유자(납세자)의 참여 및 반응을 고려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주체가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예술적/학술적 수월성을 주요 성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의 경우 수요자(대중)의 호응 여부에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술의 공공지원이 사회의 문화역량과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미술계 전문가 내부에서 소통되는 언어와 감각으로만 정책과 사업을 고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심의와 평가에 선별적으로 정책의 잠재 수요자인 일반인을 참여시켜 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 제도와의도 같이 이는 시각예술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공적 합의와 전문적 판단이 조화되는 지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NEA의 경우 공모 지원 사업 심의에 문화적 소양이 높은 일반인(비전문가)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온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7. 국가(공공) 지원이 필요한 차별화된 영역을 도출하고 집중 지원

개별 민간 단위들의 사업비 보조 개념을 넘어 공적 차원에서 집중이 필요한 부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관주도로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차별화된 서비스 역할을 찾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가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적 캠페인: 시각예술이 개인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미를 부각하고 시각예술 정책의 우호적인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프로그램 등 국가적 캠페인 수준의 집중적 홍보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발하여야 하다.

- 국제교류 시 중요 미술품에 대한 국가 보장 제도 도입: 미술관의 국제 전시가 증가하는데 반해 전시물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보험료 등 계약 조건 협상이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다보니 대형 국제 전시가 일부 민간 기획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미술관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기에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전시의 추진 및 질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높은 입장료 등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전시하는 중요 국내 미술품이나 국내 전시할 외국 주요 전시물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를 일부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전시의 다변화와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예술인문위원회(FCAH)에서 위임받아 NEA가 관리하고 있는 Arts and Artifacts Indemnity Program 참조, 1975년부터 시행되어 미술관의 국제전시 기획 비용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창출)

- 해외 미술관/박물관 한국실 운영의 내실 강화: 해외 미술관에 설치된 한국실

의 규모, 전시디자인, 전시물 확보, 관련 프로그램 등은 예산 확보와 한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에 비례하며,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실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이는 한국미술 전공 큐레이터의 채용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 국가유산으로서 진흥할 필요가 있는 미술 영역의 순회전시 지원: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성을 차지하는 시기, 사조, 작가, 장르 등에 대한 국내외 순회전시의 기획/운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일부 현대미술 작가들이 미술 시장 차원에서 국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는 한국 미술 문화와 시각예술에 대한 역사적/미학적/학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산업적,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 (NEA의 "American Masterpiece: Visual Arts Touring" 프로그램 참조, 미국 근현대 미술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된 중소 규모의 국내 순회전시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8. 문화행정의 ‘문화화’

시각예술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전반에 있어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수평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의사결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례로 최근 미술관/박물관과 관련하여 발표되거나 시행된 일련의 정책들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 입장, 국립문화기관 민영화, 기무사 부지에 현대사 박물관 건립 등 - 은 일차적으로 정책 형성 과정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계획의 타당성과 시의성면에서 재고해야 할 사안들이다. 시각예술 문화의 물적, 정신적 인프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문화적, 전문적 관점이 배재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시각예술 지원 개선 방안을 논하는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다.

토론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어떻게 세워야 할까

오 상 길(작가,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 대표)

- 문화예술위원회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 시각예술분야의 지원정책 개선안
 - 공모사업 심의제도 개선방안
 -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
 - 비공모사업 개선안

문화예술위원회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6월 3일의 <순수예술 육성을 위한 토론회>는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기초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1기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검토했다. 토론자들은 1기 예술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그 원인을 주로 위원들의 행정역량 문제에서 찾았고, 제시된 개선안들도 위원의 구성과 지원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것을 뒷받침했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는데, 그 첫째가 출범 3년 만에 원금을 1,372억원이나 축내면서, 문예진흥원의 4배가 넘는 3,5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예술위의 사업들과 운영의 문제점들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했던 점이다. 문제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개선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예정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예술위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위원구성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1기 예술위 파행의 주된 원인을 위원들 간의 합의 실패와 일부 위원들의 전횡에서 찾고 있고, 그중 위원들 간의 합의 실패는 예술위 의사결정 시스템의 설계오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서로 다른 예술분야에 종사해 온 11명의 비상임위원들에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여는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요구한 것이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예술위의 비상임위원으로 일해 왔던 한 인사가 필자에게 말한 고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대희 교수가 제안한 행정전문가 및 법조인의 위원 참여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예술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문화와 예술에 조예가 깊은 행정가와 법조인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들과 문화예술인 위원들 간의 합의가 용이할지, 그렇게 도출해내는 합의가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행정가나 법조인의 참여는 일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경험이 풍부한 사무처의 각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을 보완하여 위원들과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유럽과 미국 등의 사례를 연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문화예술계의 현실에 적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 NEA나 영국 ACE의 운영시스템이 각국의 문화예술 역사와 주변 상황 등 복합적인 조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운영시스템만을 참조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1기 예술위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예외적인 문제들에 골몰해서, 2기 예술위에 요청되고 있는 비전과 과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이다. 토론의 내용이 문화강국 및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이라는 정권의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는 관리형 수정안들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새 예술정책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 1기 예술위는 다분히 이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새 예술정책과 예술위의 틀 안에서 위원 구성이나 지원방식 등 지엽적인 문제들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2기 예술위의 개선방안이 문화예술을 복지후생 개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구정권의 예술정책 한계 속

에 머물지 않기 바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강화에 적합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이란 정권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커다란 밑그림으로부터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세부도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런 기반 위에서 2기 예술위가 새 정권의 문화예술 정책실현의 최전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곁들여 정광렬 연구원이 주장했던 '창조자 중심'패러다임에서 '소비자 중심'패러다임으로의 변화나 소비자 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은 예술과 문화의 정책분리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생산과 소비 어느 한 쪽에 치중해 이를 수 없으므로, 문화예술 정책은 생산과 소비 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각예술분야의 지원정책 개선안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정책은 현재 미술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시각예술 분야는 1990년대 이후 제도 기관들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팽창되면서 현장과 제도 간의 불균형과 가치전도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런 현상들은 현장 예술활동의 둔화와 미술담론의 실종으로 이어져 트렌드 중심의 서구미술 소비시장화를 고착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제도 기관들은 그 위상과 영향력에 비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종종 특정 성향이나 인맥, 학맥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미술계의 골 깊은 불신과 갈등을 일으켜 온 측면이 있어, 이 기관들에 지원을 더 높여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예술위는 예술가들과 미술제도 기관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적이 선명하고 방법이 견실한 프로젝트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해 갈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 심의제도 개선 방안

예술위의 시각예술분야 지원은 크게 공모사업과 아르코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이하 인미공), 비공모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공모사업은 심의에 대

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술가들이 심의위원이 되어 다른 예술가들의 신청 사업을 심사하는 구조상, 늘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심의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심사과정 공개방안과 탈락자들의 요구에 한한 재심의 제도운영 그리고 역시 요구가 있을 경우 탈락 사유에 관한 심의위원의 적극적 해명 등을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지원사업들을 진행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방안들은 처음엔 다소 번거롭겠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과 소모적 논란, 무분별한 지원신청, 불투명한 사업비의 집행 등을 현저히 줄여 줌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

아르코미술관 인미공은 다른 미술공간들에 비해 사업예산의 규모와 기획 여건 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계 안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인미공은 올해 6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지만, 전시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가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아카이브 사업, '볼'의 발간 등에 걸쳐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매년 약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아르코미술관도 이런 맥락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예술감독 체제로 전환한 올해의 사업계획을 통해서도 예산과 제반 여건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두 공간은 공적 공간의 위상과 여건에 걸맞지 않는 조잡한 합성용어나 신조어 등을 통해 미시적 산만한 방법론들을 제시하면서 유행현상을 부추기는 등 사업의 내용들이 조악하고 대상과 주체가 매우 편협하여, 그 저변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르코미술관과 인미공은 우리 미술계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미술제도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아르코미술관을 중견작가 위주의 전시공간으로, 인미공을 유력한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양성하는 전시공간으로 차별화할 필

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동시대 미술의 첨예한 쟁점들을 분석해 내고 한국미술로서의 대안성을 도출해내는 일에 주력하며 비평담론을 활성화시키는 등 미술의 공공적 가치제고를 주도함으로써 공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가야 한다. 아카이브 사업을 아르코미술관으로 이관하여 각종 정보와 지식 등을 수합·정리·보급하는 종합정보센터로 활용하고, 당대 미술의 가치제고에 주효한 교육 및 출판 활동과 시민애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인미공은 대다수의 관람자들이 원서동까지 이동거리를 확대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 접근성이 좋은 인사동이나 사간동으로 다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방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효용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공모사업 개선안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비공모사업은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시공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어 왔다. 비영리전시공간은 상업 화랑이나 기성 미술관 등 제도미술에 대응하는 대안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의 비영리전시공간들 대부분이 무엇이 자신들의 대안성인지조차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협의회를 통해 섹트화되면서 배타적인 성향마저 드러내는 등 오히려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이 협의회에 속한 전시공간들의 블록화와 권력화, 제도화 등을 유발시켜 왔다는 점에서, 각 공간의 특성과 사업내용들을 세심하게 선별하여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공모사업도 예술위의 사업인 만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공모사업들과 같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검증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필자는 1기 예술위가 중견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에 인색해 왔음에 주목하여 2기 예술위가 중견작가들을 위한 별도의 비공모사업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견작가들을 위한 지원은 도록제작비나 단순한 전시행사 지원을 넘어 예술적 성취를 검증하고 비평적 가치를 제고하여 담론화해 가는 고도의 전략사업이 되어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철지

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미술계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진술되어온 20세기 한국미술의 역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역사진술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르코미술관의 기획전시와 연계하여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2기 예술위는 1기 예술위의 시행착오를 만회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예술계의 상황과 세계 문화예술의 동향에 밝으면서도 탁월한 기획력과 주도면밀한 추진력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문화부와 예술위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예술현장과 제도 그리고 애호가들 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 사이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 토론이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위의 개선안으로 나타날 수 있기 바란다.

토론

시각예술 지원에 따른 제안

장 유 호 ((사)한국미술협회 기획정책위원장)

- 시각예술의 개선의 의미
- 문화예술위원회의 인적구성
- 미술시장의 현실성과 대안
- 미술 지원신청의 원칙
- 지원심의 개선
- 다액소건 지원의 전환
-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병행

시각예술의 개선의 의미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과 기금지원정책에 대한 검토는 시기적으로 타당성을 지닌다. 문화예술위원회의 1기에서의 부작용은 분명 개선되어야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권력의 기관이 아니고 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이에 문예진흥기금의 올바른 선정과 지원은 개개인의 예술가치 창출과 더불어 미술발전과 전반적인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실은 얼마나 문예진흥기금이 문화예술지원의 의미와 미술계 및 일반 대중의 향유권적인 입장, 국가의 문화 정책방향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제2기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발의 모델은 미국의 NEA(미국국립예술위원회) 영국

의 ACE(영국예술위원회)의 구성과 지원의 형태를 따른다는 데는 매우 아쉽지만 근거를 세우는 측면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내 여건에 따른 운영 지침은 현실에 맞게 제도화 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인적구성

몇 가지 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에 관련하여 예술위원회의 구성은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적인 틀에 입각하여 경영적 마인드로 예산의 효율성에 의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재 소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판단에 의해 소위원회가 폐지된다면 이것에 대한 인적구성은 다양한 모델이 제시 되겠지만 문화관련 전문성을 지닌 기관책임자, 예술행정 경영자, 학술연구원, 교수, 평론가, 작가, 문화 컨설턴트, 문화저널리스트 등이 참여되는 다각도의 문화와 예술계의 사람들이 참여되는 현재의 인적구성원 보다 구성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미술시장의 현실성과 대안

현재 한국의 미술계에서 염려하는 것은 올바른 미술가의 위상과 가치의 붕괴이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는 곧 미술의 질적 향상과는 먼 상업적 거래에 의한 미술의 대중화라는 미명하에 인기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고, 세계미술시장과는 거리가 있는 근본적인 미술의 가치를 외면하는 부정적인 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원의 올바른 선택은 미술계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와 창조적 예술의 가치에서 출발하고 지원심의 원칙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과 수단을 배분하고, 각 지원프로그램에서도 전략에 따른 지원방식, 지원심의, 지원대상의 규모, 지원범위 등을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지원정책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소액 다 건에 의한 집중적이면서도 지속력을 통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 일회성 프로젝트에서 지속력을 가진 검증된 거친 단체중심으로의 지원 전환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례로 미술인들의 위상과 명예를 살릴 수 있는 '미술인의 날'의 정착이

라 할 수 있다. 모든 미술인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추천하여 그해 가장 열심히 미술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올해의 미술대상을 수여하고, 원로작가에게는 평생의 공로를 인정하는 미술인 공로상과 젊은 작가에게는 비전을 갖도록 올해의 젊은 작가상을 주는 그리고 각 부문별 시상을 통하여 의욕을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미술관계자 및 많은 대외적인 인사들을 초청하여 미술인들의 활동과 미술인들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 축제의 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미술인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향유권자와 함께하는 미술진흥의 밑바탕이 되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이에 1회성, 소모성, 보전에 목적을 둔 개개 예술 활동의 유지와 보전을 위한 차원보다는 문화예술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지원대상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우수한 단체나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일정한 수준이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에 충실해야 한다. 해당 단체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관련 예술분야, 향유권 신장, 전반적인 문화역량 제고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

미술 지원신청의 원칙

이번 문화예술의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있어 시각예술을 다루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한 것으로 문화예술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예술가 지원보다 예술진흥에 있다.' 라고 한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예술행위 활성화와 예술향유수준,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역량강화, 예술의 우수성, 취약계층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5가지 측면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원칙은 최근의 미술시장의 성장과 변화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잃은 작가들은 상업적인 고자세에 휘둘리고 자기 발전이 없는 미술작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술창작의 기본 개념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미술 흐름에는 거리가 먼 미술활성화는 매우 한정적인 발전만을 생각하는 안이한 자세라 할 수 있다.

미술은 고 부가치를 만들어 내는 문화콘텐츠이다. 이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문화강국을 이끌어내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축적된 미술 인프라에 의해 미술시장의 개척과 다른 문화와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지원과 정책은 지원을 통한 해당 지원 대상에 대한 바람직한 파급효과로 사회에 대한 파급효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술지원은 해당 지원 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영향, 해당 분야 예술 및 사회에 대한 효과를 전제로 한다.

지원심의 개선

공모지원은 사업공고-공모신청 - 심사 - 선정 - 사업진행 -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일반적 관례에 의한 평가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간접형 지원은 아니지만 결과적 성과에 대한 판단을 겸한 사전에 사업의 규모와 참여미술인 수, 사업(행사)감행역량, 파급효과(대상관객 수 등),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1차적인 사전심의와 사전지원 그리고 사후지원 및 평가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지원 및 사후지원의 유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다액소건 지원의 전환

소액 다건의 형태에서 다액 소건의 전환이 필요하다. 1회성 프로젝트 소모성, 개개 예술 활동의 유지와 보전을 위한 차원 보다는 문화예술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의 역량강화와 육성지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것은 다년간 프로젝트나 또는 미술단체 지원 중심의 전환으로 특성과 여건에 따른 적절한 규모와 지속적인 방식의 지원을 의미한 것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필요로 하지만 타당성을 지닌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병행

직접지원은 실질적인 혜택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지원의 성공적인 접근을 위하여 다른 조직이나 방식을 통하여 지원을 이뤄내는 것으로 예술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간접지원형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미술관 또는 공공장소의 활용 학술 및 이론의 연계 미술문화의 역량강화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을 직접지

원과 간접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각예술이 지원의 중요성은 시장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본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풍토에서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예술에 지원되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정책의 원칙과 지원의 의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세 가지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 창작지원

김 성 래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상임이사)

- 미술관 운영자로서의 관점
- 예술경영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자로서의 관점
- 작가로서의 관점

1. 미술관 운영자로서의 관점

가.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미술관에 대한 지원시행

영리목적 또는 기업 설립의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대다수 비영리의 등록된 사립 문화공간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전국 각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함.

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시행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및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진입시설, 점자안내표지, 점자안내문, 무료이용시설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비영리 문화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집중지원

경기북부 등 전국일원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문화공간에 대한 문화행사 집중지원 및 경기북부 와 서울북부소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육시설 아동, 청소년 등 문화소외계층(차상위계층 포함)을 위한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해 기존 박물관미술관을 매개로 한 문화체험 및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함.

2. 예술경영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자로서의 관점

가. 아르코 주관 청년인턴채용지원 사업의 지속 및 확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 및 문화기관의 큐레이터 등을 지망하는 학부 재학 이상의 인력을 위한 청년인턴 사업의 지속 및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현행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경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청년인턴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인력이 희망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연령제한도 현행보다 범위를 넓혀 35세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대학원 이상의 재학생 및 군필자 남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함.

나. 산학연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대학, 연구기관, 미술관 및 문화시설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특별전 및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 교육기능강화와 문화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기여 확대, 그리고 예술경영 전문인 희망인력의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함.

다. 예술경영(문화예술분야) 인력풀제의 시행

문화관광부 또는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예술경영(문화예술행정, 문화기획 등) 관련 전공의 대학 재학이상의 인력을 활용하여 인턴사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기간의 행사 진행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문화예술 전공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함.

3. 작가로서의 관점

가. 작가선정의 기준 체계화

학부에서의 미술관련 전공 및 부전공 여부, 개인전 개최경력, 단체전 및 초대전 참여 경력, 지속적 창작활동 여부 등을 비롯하여 수상경력, 교육경력, 저서 간행, 연구논문 발표, 미술분야 행사주관 및 심사경력 등 형평성을 이루는 선정기준의 체계화 확립 후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나. 다양한 작가 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세대별(신인, 중견, 원로 등) 및 장르별(평면, 입체, 공예, 디자인 등) 선정 작가 층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각예술분야 전반에 대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심사회피제도의 시행

특정 학연 단체 혹은 개인 지원의 경우 심의대상자와 동일한 대학 졸업자를 심의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심사회피제도를 시행하여 지원작가 선정에서 학연에 의한 지원이 어렵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토론

미술계 현황의 변화와 시각예술 지원정책 조정의 필요성

김 윤 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

- 구체성 : 사후지원 방식은 적정한가
- 형평성 : 객관성과 명분 있어야
- 현장성 : 수요자 계발 및 재교육
- 전문성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 실질성 : 창작환경의 안정화
- 지속성 : 체계적인 발전도모
- 연계성 : 국제적 네트워크 지향

국내 미술계 현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공급자 중심의 미술계 환경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구성원으로 합류한 수요자의 역할과 무게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술계의 체질이 점차 '시장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시각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책은 다양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가의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예술 본연의 진흥'에 있음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의 확대나 그 역할을 수행할 예술단체의 육성 및 역량 강화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일 것이다. 현재의 미술계 현황의 변화는 시각예술 지원정책에 어떤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 요인을 살펴보면 보다 발전적인 대안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국내의 미술계 현황이 이토록 급격히 변화하게 된 계기는 무엇

일까? 우선 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첫 번째이다. 기존엔 미술의 사회적 역할이 한시적이거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특정 계층의 기호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점차 불특정 다수의 대중적 향유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이젠 미술품도 엄연히 투자대상이라는 인식 역시 보편화 되고 있어서, 미술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남다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이다.

두 번째 요인은 유통구조의 다변화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 수요자의 증가는 유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존의 넘쳐나는 공급자(한국미술협회 정회원 기준 2만5천명 이상) 대비 극소수의 수요자에 의존했던 형태로는 정상적인 시장형성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신 수요자의 합류는 점차 시장의 기반다지기과 선진화를 앞당겨가고 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 수요자 층은 이미 다른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미술시장의 선진화와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국제 미술시장의 평준화를 빼놓을 수 없다. 미술시장의 국제화는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주변국 중국의 북경이 국제 미술시장을 새롭게 편제하는 중심지로 급격히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힘입어 많은 외부적 요인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우리의 미술가나 미술계 구성원의 해외진출 혹은 국제적 네트워크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결국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현황이 재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의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 역시 자연스런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경쟁 논리가 존중되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예술진흥이 곧 한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결정짓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각예술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조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순수예술 육성을 위한 토론회>의 주제2 「문화예술 창작지원 방식 개선」에 가장 중심 준거는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 속의 예술'이었다. 이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되고 있는 예술정책 기

조와 동일한 노선이다. 전반적으로 그 취지와 명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화는 '백년대계'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문화는 단순히 유행할 트렌드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만드는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명실공히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틀이 될 것이다.

1) 구체성 : 사후지원 방식은 적정한가

* 현대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았다. 문화영역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흔히 순수 창작물로서의 문화를 논할 때 시장논리를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꺼리는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그 문화가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한다면 시각을 좀 더 달리해야 할 것이다. 문화를 단순히 결과나 성과에 대한 분석보다 순수 창작물의 생산을 위한 측면만을 감안한다면 지원의 효율성마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이번 정부 들어 '사후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한 많은 이의제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사후나 사전, 간접이나 직접이건 간에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은 '예술진흥'일 것이다. 다만 실행방법의 문제일 뿐이다.

* 어떤 상황이나 지원되는 방식 이전의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이들의 공감과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술형식의 진흥'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바로 '시대적 감성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문화기반을 만들어보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 동시대의 감성을 리드하는 문화적 트렌드는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만약 문화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써 사후지원 방식이 고려된다면, 우선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현장사례 연구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 따라서 사후지원 방식은 우후죽순 늘어난 수많은 문화 콘텐츠 중에서 시대적 감성을 이끌어갈 사례를 효율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객관적인 준거자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형평성 : 객관성과 명분 있어야

* 어떤 지원 형식이든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면 설득력을 잃기 마련이다. 가령 지원 단체의 규모나 연혁, 구성원 수, 대외적인 실적 등은 기본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심의과정 초반에 이미 친분이나 성향으로 지원단체가 축약된다면, 그 보다 더 미술계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을 것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보다 많은 수혜자의 범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장성 : 수요자 계발 및 재교육

* 문화 역시 생산주체인 예술가와 중개인 그리고 수요자 간의 상호 균형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어느 특정한 구성원만이 강조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그런 면에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수요자들이 시각예술을 좀 더 편안하게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의 진정한 힘은 현장에서의 교감에서 발휘된다.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를 위한 현장 재교육 측면으로까지 진흥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경매 현장 등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계발의 독려나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겉보기엔 상업성이란 측면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미술문화 향유의 대중화'라는 측면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사안이다.

4) 전문성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 문화는 대중이 만들고, 그 문화를 이끄는 것은 소수의 전문적인 인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만한 고급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정확히 말하자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적 교육기관이나 사적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젊은 인원이 현장과 상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장은 태부족하다. 궁극적으로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사례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예시 중 하나는 '미술품 감정인원' 육성이다. 미술시장의 규모가 넓어지고, 일반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는 미술계 혹은 미술시장의 대외적인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5) 실질성 : 창작환경의 안정화

*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조직이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창작환경의 안정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가 된다.

* 미술가들을 위한 복지후생, 관련 제도의 개선 등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가령, 복지제도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일부에선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재분배'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문화 관련 산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시된다.

* 결국 예술인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제도가 법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공적인 역할을 입증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6) 지속성 : 체계적인 발전도모

* 선택과 집중보다는 소액다건에 치중하다보면 일시적이고 일회성 지원에만 그칠 수 있다. 이는 문화전반의 질적 완성도와 긍정적인 발전모델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대부분의 문화행사나 그에 준한 활동은 적어도 수차례의 정기적인 반복과 누적에 의해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것이다.

* 따라서 1차 지원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은 경우 반복 및 누적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응용사례로써 다른 지원제도(기관)와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도 고려해볼 만하다.

7) 연계성 : 국제적 네트워크 지향

* 최근 국제 미술계의 특징은 평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 '유럽권' 등의 권역 단위가 광범위해졌다. 최근 국내 미술계에 불고 있는 해외로의 진출러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장려할 만한 국내외 교류전 혹은 국내 미술가의 해외 전시, 국제적인 무대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 등의 기획전도 그 중심 수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미술계의 직접 당사자인 내부 인원 못지않게, 수요자의 국제적인 인식변화도 이러한 지원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술비평이나 출판, 미술교육과 학술, 보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하겠다. 그 이유는 미술의 시장(경제)적인 측면이 비대한 유형의 성장을 이끌게 된다면, 그에 못지않은 무형의 내면적인 측면도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는 지원정책 펼쳐야

이 건 수 (월간미술 편집장)

- 작가 창작 중심의 지원에서 큐레이팅, 비평, 출판 등 다양한 미술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있어야 함
- 시각예술 출판은 수요자 창출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필요.
- 원로 및 중진, 신진작가 3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도입 필요

○ 그동안의 시각예술 지원정책은 작가에 대한 지원, 특히 창작에 대한 지원이 대다수였음. 실제 대학미술교육도 작가만들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함. 그러나 미술이라는 것이 작가와 큐레이터, 비평가, 갤러리 경영자, 저널 및 출판 관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

- 따라서 창작을 둘러싼 갖가지 미술문화가 자기 역할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이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함.

- 그러한 측면에서 자생성이 취약한 한국의 시각예술 출판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이는 수요 창출을 통한 공급 지원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음. 즉 독서를 통해 시각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층들이 양성된다면 작가의 입장에서든 도움이 되는 것임. 몇몇 출판사 등에서 시각예술 관련 책자를 발간하더라도 독서시장이 이를 수용해주지 못해 지속적인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음. 시각예술에 대해 수요자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미술출판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발제자가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음.

- 공적 영역은 소수의 엘리트 대신 소외되고 차별받는 작가들에게 든든한 지원군과 같은 기능을 담당해야 할 소명이 있음.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가 될 것이며 그들은 공적영역의 지원없이도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므로, 선택과 집중은 지원이라는 단어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일 수 있기도 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발제자가 말씀하신 '간접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안공간 및 인사미술공간 지원프로그램이 개선되어 나가길 바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공성'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주어야 하는 것임.

- 그렇다면 지원받는 공간은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몇몇 특정 장르 및 작가들만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공공성이 일정 부분 훼손될 수 있음.

○ 발제 내용 외에 그동안 생각해왔던 한국미술의 문제점과 지원정책 방향을 설명하고자 함. 한국미술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단절'이라고 생각함. 미술문화는 장시간을 거쳐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미술문화는 소통이 단절되어 있음. 그러한 측면에서 시각예술 지원정책은 단절된 지점을 이어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세대간의 단절, 중앙과 지방의 단절, 전통과 현대의 단절이 심각함. 이를 교정하는 지원정책의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 세대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3대가 잘 되는 집안이 번창하는 집안임. 할아버지(원로), 아버지(중견작가), 자식(신진작가) 모두가 존중받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지원프로그램을 모든 연령대의 작가들이 치우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필요. 현재 시각예술분야의 지원프로그램은 신진작가, 실험 위주의 작가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중심의 시각예술 문화는 지역작가를 소외시키고 있음.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 등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행사의 경우도 외지에서 온 작가들이 대다수임. 그렇게 진행된 행사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함. 서울에 비엔날레 사무소 또는 전시관을 두고 광주와 부산의 작가들이 전시를 즐기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 한국 전통의 동양화 등이 좀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되살아나길 원함. 우리 전통의 예술작품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그러한 전통기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각 학과마다 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 미디어 및 방송이 중요해지는 환경에 대한 시각예술 분야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시각예술이 국민의 삶 속에 체화되기 위해서는 방송 및 미디어에 빈번하게 노출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구에 시각예술 전문가들을 진입시킬 수 있도록 시각예술 분야의 힘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국제화시대에 국제적 큐레이터 양성이 필요함. 비엔날레와 같은 큰 전시에서 감독을 일정 정도(5년) 유임시켜 충분한 경험을 쌓게 한다면, 국제적 큐레이터가 양성되어 한국 시각예술의 인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다원예술

발제

다원예술, 그 현황과 과제

이진아(2기 다원소위 위원, 숙명여대 교수)

- 변화된 예술 환경
- 다원예술분야의 몇 가지 쟁점들
-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
 - 정체성의 문제, 지원 정책상의 문제, 사회적 홍보 활성화, 네트워킹의 강화, 기획 및 매개 사업 활성화, 예술위원회와 다원예술소위원회의 운영 안정화, 현장참여, 소통확대, 다원예술 비평 활동의 활성화, 다원예술 중장기 정책기반 사업 체계화

1. 변화된 예술 환경

20세기 후반 이후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장르 간 경계의 해체, 미적 가치 규범의 변화,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개념의 해체는 국내외 예술계의 지형도를 바꿔 놓고 있는, 오늘 우리의 당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디지털 혁명, 초국가적 문화자본의 성장,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수용자 그룹의 등장, 예술 유통구조의 변화, 제작-향유 방식의 변화 등, 상이한 방향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얽힌 채 포진해 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발전과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예술가 내적 표현 방식의 확장이나 예술 향유자(수용자)의 수동적 태도를 좀 더 적극적 감상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보려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술 자체의 의미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이것은 실천적, 도덕적, 과학적 관심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창성과 자율성을 존재 기반으로 삼았던 근대적 개념의 예술이, 이제 그 개념의 근간으로부터 다시 되돌아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 창작과 감상에 이르는 소통의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원예술은 이러한 현상과 이 현상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분야이다.

2005년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위원회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장르소위원회 중 하나로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설치된 지 어느새 세 해를 지나왔다. 예술위 내 '다원예술' 분야 설치에 변화된 예술현장을 반영하려는 의지인 동시에 주류장르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예술현상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일 것이다. 더불어 기존 장르 중심의 지원 정책이 예술현장의 역동적인 작업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술지원정책과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반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설치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원예술이란 명칭 하의 지원제도가 수립되기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문예진흥원은 '실험예술지원사업'(1997년), '대중예술활동지원'(1997년), '독립예술지원사업'(2001년), '다원적예술지원'(2002년) 등의 다양한 명칭 하에 소외된 영역을 정책 안으로 아우르고자 하는 여러 모색을 해 왔는데, 그것이 문화예술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다원예술'이라는 일종의 장르 개념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예술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다원예술 분야 지원 사업은 생각처럼 적극적인 현장의 지지 하에 순조롭게 전개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가장 전면에서 제기된 것은 장르 개념으로 제시된(사실 기존 장르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다원분야가 다시 장르 개념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원예술'의 정체성과 정의에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지난 문예진흥원 시절 수년간 변화를 겪으면서 진행되어 왔던 '실험', '독립', '대중예술', '다원적' 등의 수사가 붙은 일련의 지원정책들을,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가치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용어 하에 포괄하고자 한 것에서 온 필연적 혼란이었다. '다원예술'이라는 용어 안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가치와 개념이 정리되지 못한 채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용어는 그때 그때의 맥락과 해석 주체에 따라 탄력적이고 주관적으로 정의되어 오면서 종종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제 명칭이 형성된 배경은 문헌 채 용어만 남아 회자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러한 오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혼란은 그대로 예술현장, 평단, 정책입안자, 일반인 모두에게 전이되었다. 일종의 정책상의 요구로 만들어진 용어가 마치 견고한 장르 개념인 양 비평적 검토

없이 예술계 일반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의도는 희석되고 자의적으로 해석,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얼핏 용어와 개념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훨씬 복잡하여, 구체적인 지원 정책 하에서 '전문성'의 문제, 예술가 개인 및 작업의 정체성 문제('너는 누구를 다원예술가라 부르는가?', '나는 왜 다원예술가가 아닌가?', '당신은 언제부터 다원 분야의 전문가 자리에 앉아있는가?', '저 사람과 나의 작업이 하나의 용어 하에 묶일 수 있는가?'), '현장과 정책의 소통문제'('왜 내 작업을 다원에서 주목해 주지 않는가?', '그의 작업이 나의 작업과 다른 점(지원받을 가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무슨 잣대로 그것을 결정하는가?'), 심의-지원-평가의 문제('다원예술을 기존 장르 비평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 '당신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를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서로 다르고 또 다양한 작업들을 하나의 용어 하에 묶는 과정에서, 실제 자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다원예술계'라는 용어가 먼저 형성되고, 이 용어로 인해 추상적으로 형성된 개념이 역으로 구체적인 현장의 존재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다시 이 지점으로부터 비평적 또는 정책적 입장의 접근과 현장의 역사와 계보를 구성하려는 욕망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정리하려는 노력을 그간 1,2기 다원예술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는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 진행한 2006-2007 포럼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다원예술소위 1기에서 발주한 2006년도 연구 과제 '다원 예술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는 다원예술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집약, 정리된 결과물이며, 다원예술소위 2기에서 발주한 2007년도 연구 과제 '다원예술 지원정책 현장 수요 보고서'는 현장의 요구와 정책 간의 간극을 줄여보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린지 페스티벌, 다원예술매개공간 등을 중심으로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포럼과 세미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제의 해결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명쾌한 제안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다원예술 현상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전체 예술 지형도 안에서 다원예술이라는 분야가 지니는 위치를 가늠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예술계 내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원예술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고 인식시키는 데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이에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고민하면서 다원예술분야 지원 정책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2. 다원예술 분야의 몇 가지 쟁점들

1) 개념의 문제

- 현재의 '다원예술' 명칭은 장르예술로서의 정의와 예술계의 변화양상을 동시에 포괄하는 문제적 명칭
- 이 개념어에 대한 접근은 ①기성예술 관습의 대안적 개념 ②장르예술의 상대적 개념 ③새로운 예술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려는 전략적 개념 ④변화에 유연하고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려는 개방적 개념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p46)
- 개념을 하나로 규정하려는 것보다 지원대상의 유형을 나열하는 방식, 더불어 이를 예술계와 사회구성원에 홍보하는 방식이 중요

2) 기존 지원정책의 변화 요구

- 지원 영역과 범주 설정의 문제
- 다원소위 혁신방안에 명시된 바 다원예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중심점을 제시한다. ①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 활동(탈장르 예술, 복합장르예술, 실험예술) ②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활동(문화다원주의, 예술 활동의 공공성) ③ 비상업적, 비주류적 예술활동(독립예술, 대안예술) 이를 바탕으로 다원예술 지원영역은 예술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실험성의 지향 가치를 추구한다.
- 그러나 사실 이는 다원예술만이 추구해야 하는 과제는 아니며 모든 예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일 것이다(장르 중심적 지원에서 목표 지향적 지원으로).
-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는 현대예술의 지형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 창작활동으로서의 다원예술분야가 제기하고 있는 기존 예술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지원정책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보고서 17쪽).

예술환경 변화	문제의 제기	지원정책의 쟁점
예술의 탈물질화	작품의 탈물질성 경향이 증가함: 작품을 평가할 수 없음	결과물에 대한 개념수정을 통해 작품이 아니라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문제가 제기됨
	창작과정 및 아티스트의 기획을 통한 예술활동 추구가 증가	과정을 지원하거나 기획을 지원해야 함
예술의 다문화주의	작품 창조와 향유의 민주화: 예술의 공공성, 삶의과의 밀착성 강조, 전문 예술인의 개념 확장 및 변화	새로운 개념의 대중(공공, public) 예술, 예술이 대중의 삶을 논하는 장이 되는 다양한 활동의 지원기준이 필요해짐
	소수자 문화 및 이질적인 문화요소에 대한 욕구 증가	독립예술, 소수자문화운동 등 현상의 나열을 넘어 주변부 문화, 지역운동, 사회참여의 예술실천을 수용하는 예술지원정책의 철학 필요함
공동체 기반의 예술	향유와 소통의 쌍방향성: 유통구조의 변화 및 소통방식의 다양한 실험에 대처해야 함	매체의 실험이나 장르의 융합과 마찬가지로 소통방식에 대한 실험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시공간 개념의 확장: 기존공간(미술관 전시, 극장 등)에서 벗어나는 작업, 기존의 시간개념에서 벗어나는 작업 활성화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수용자와 함께 만드는 작업, 생활공동체 및 아티스트공동체 속에서 지속되는 작업과정 등 기존의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는 프로젝트를 수용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해짐

요약하면 다원예술 분야는 기존의 예술계 및 예술 지원 정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 새로운 예술주체 발굴, 새로운 주체 형성의 장 개발
- 장르 중심적 지원이 아닌 목표 지향적 지원체제로 변화하는 문제
- 결과물(작품) 중심의 지원 관행으로부터 탈피
- 지원방식의 유연성(공모방식 탈피, 지원내용의 다변화)
- 변화된 예술 환경과 지원정책에 따른 '심의-평가' 제도 마련

3. 다원예술소위원회 결성과 그 이후

- 제1기 다원예술소위원회는 피동적 정체성이 아닌, 다원예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과 예술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실천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실천들을 일차 목표로 삼았다.

- 어느 정도는 소위의 발족 및 활동과 함께 '다원예술계'의 실체가 좀 더 빠르게 가시화되어 나갔으며(장르 소위로서의 설치, 포럼 진행, 연구조사 사업, 매개공간 설치 등) 다원예술 분야의 담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다원소위의 포럼은 초기부터 현장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성원으로 포럼은 곧 다원예술계 담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포럼의 현장 참여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반성적으로 재검토 해 보아야 한다)

1) 2006-2008 다원예술소위원회 포럼 주제

제1기 다원예술소위원회 포럼

차수	일시	주제
1차	2006년 4월 28일	현장예술인들과의 만남 1 - 다원예술 낙선포럼
2차	2006년 5월 19일	현장예술인들과의 만남 2 - 예술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3차	2006년 7월 7일	다원-지역소위 합동포럼 - 지역은 또 다른 비상구
4차	2006년 8월 17일	현장예술인들과의 만남 3 - 탈장르예술 비평을 비평한다
5차	2006년 10월 31일	다원예술의 현재와 미래

제2기 다원예술소위원회 포럼

차수	일시	주제
1차	2007년 5월 7일	다원예술 매개공간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2차	2007년 6월 4일	새장르 공공예술의 공공성
3차	2007년 9월 17일	예술의 공공성 논의, 어디까지 왔나?
4차	2007년 10월 10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호주의 다원예술

5차	2007년 11월 8일	다원예술 비평은 존재하는가
6차	2007년 11월 12일	마을과 예술 : 새로운 예술의 현장
간담회	2007년 10월 8일	진단과 모색-새로운 예술과 예술 정책

제3기 다원예술소위원회 포럼(현재 진행 중)

대주제- 다원예술지형도 그리기(다원예술 생태계 파악)

차수	일시	주제
1차	2008년 5월 8일	다원예술 현장 네트워크의 현황 및 과제
2차	2008년 6월 12일	다원예술 지원사업 제도의 성과, 그리고 개선방안
3차	2008년 7월 10일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전망과 대안

2) 매개공간운영

다원예술 매개공간은 그 동안 ‘(가칭)대안문화센터’ 등, 소위 내에서 제기되었던 물리적 거점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다원예술 매개공간은 거점공간의 확보를 통해 다원예술분야 창작자 간의 소통, 창작활동의 네트워크, 다원예술 현장과 정책단위 사이의 소통 등을 모색하고자 조성되었다.

현재 홍대 앞에 마련되어 운영되는 다원예술 매개공간의 추진 배경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원예술매개공간 성과보고서> 6-8쪽)

1)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표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1기의 기획(직접기획사업)
- 2) 다원예술분야의 인프라 확충의 초기단계로 예술가들의 소통,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다원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추구(→다원예술분야 기획발굴사업안 <사업목적>)
- 3) 다원예술분야의 실험성을 담보할 전용공간이 없어 예술현장에서는 ‘대안문화센터’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4) 다원예술분야의 창작주체간의 활발한 교류, 쇼 케이스를 통한 발표기회 제공, 다원예술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예술창작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5) 다원예술 주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소통, 교류 창구를 확보하기 위함(→이상 3)4)5) 다원예술분야 기획발굴사업안 <사업의 필요성>)

6) 예술현장의 변화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다원예술 활동장과 자생력의 토대를 마련하며, 능동적인 정책구성을 위한 포럼과 교류효과, 예술가 재교육 및 매개자 발굴 등을 기대하게 됨

(→안이영노, 다원예술위원회 포럼 <다원예술 중장기 전망과 매개공간의 의의>, '매개 공간 운영 논의의 배경' 중에서)

2) 다원예술매개공간의 기능

-매개공간이란 다원예술 '활동장'을 만들어내는 기능이며, 다원예술 분야가 자생력을 갖도록 다양한 일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한 모임 공간

(→안이영노, 다원예술위원회 포럼 <다원예술 중장기 전망과 매개공간의 의의> 중에서)

⇒ 매개의 종류 : (1)사람과 사람 (2)사람과 공간 (3)공간과 공간

(1) 사람과 사람의 매개 : (A장르)예술가-(B장르)예술가/(A지역)다원예술가-(B지역)다원예술가/다원예술가-다원비평가/예술가(artist)-관객(art public)/예술가-후원자
...

(2) 사람과 공간의 매개 : 예술가/비평가/관객/후원자-향유/교육/논의/소통 공간...

(3) 공간과 공간의 매개 : 현장(지역)공간-비평가 정책(중앙)공간/실연공간-가상공간...

3) 다원예술매개공간 2007의 과제

1) 물리적 공간의 확보와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를 통한 초기공간 안정화
2) 매개 프로그램 시범운영(상시 운영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

2) 다원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제안의 수렴(생각들의 매개)

⇒1)>2)>3)의 비중

약 1년여의 실험적 운영을 반성적 비평적으로 점검하면서 매개공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재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의 요구들을 파악하고 공간이 진정한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제기되는 과제들

1) 정체성의 문제

- 영역 및 대상의 구체화(현장, 지원정책, 작업)
- 정책 차원에서의 다원 영역 대상 구체화(예술 현장과 정책의 괴리)
- 지원 정보 제공 구체화, 영역 및 대상 다층화
- 다원예술 생태계, 지형 파악

2) 지원 정책상의 문제

① 사용자 중심 지원 환경 확보

- 연속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지원 사업, 지원창구), 인큐베이팅, 자생성 확보 등을 목표로 체계적 지원
 - 형식화된 사업보고 최소화, 정산 절차 등 간소화,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

② 공모, 심의, 평가제도 개선

- 현장 밀착, 발굴 지원제도 활성화, 계기성 지원사업의 보완 및 활성화(상시 지원제도)
 - 심의 과정 자체에서의 '지원정책과 현장 간의 소통 과정' 활성화
 -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실질적인 심의위원 풀 제도 운영
 - 심의 결과의 객관성(예측 가능성) 확보: 심의 기준 및 결과에 대한 현장 소통,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 지원 방향성 등 공유
 - 평가의 소통 방식, 평가결과에 근거한 지원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함

③ 지원사업의 다각화

- 상시 컨설팅 센터 및 인력 지원 시스템 운영

3)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홍보 활성화

- 외부 기관, 기업 등과 개별 아티스트의 연계 지원 : 아티스트 특징, 작업 리스트 등을 만들어 외부 기관, 기업 등에 제공하고(아카이브 사업과 연계), 민간 지원자 및 스폰서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지원제도 기획

- 기금 지원 이외의 인력, 정보 등 지원 정책 활성화, 다원예술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자료실 운영, 사이버 자료실 운영, 아카이브 구축 등, 도큐멘테이션, 작업 결과물 등에 대한 유통 지원 활성화

4) 네트워킹의 강화

- 예술가 상호 간의 네트워킹 협력, 인력 정보를 상호 제공하거나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 마련

- 예술가와 기업체, 페스티벌, 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

- 예술 작업 환경 구축

5) 기획, 매개 사업 활성화

- 상시적 소통 구조 정착, 현장과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시스템 보완

- 기획, 정책에 있어 사업의 대상, 지원영역, 사업의 목표 등에 대한 예술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 필요, 가능하다면 공개 포럼 등 의견 수렴과정

- 컨설팅 창구 개설

- 낙선자 포럼의 상설화

6) 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의 운영 안정화, 현장 참여, 소통 확대

- 소위원회 회의록, 각종 포럼 자료 등을 쉽고 자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소위원회 활동 범위와 역할 구체화 : 설정된 활동 범위와 정체성에 기반하여 중장기 지원사업 목표 수립, 11인 위원회 - 사무처 - (다원예술)소위원회 간의 연

계성을 일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

- 소위원회 위원들의 대외 활동 강화

7) 다원예술 비평 활동의 활성화

- 비평지 및 비평의 장 활성화
- 대안적 비평적 기능 모색

8) 다원예술 중장기 정책기반 사업 체계화

- 다원예술 아카이브 구축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다원예술 매개공간 연계, (가칭)다원예술지원센터내 아카이브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등 그 동안 진행된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추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집행
: 다원예술 현황 파악 조사연구, 다원예술 지원효과 연구, (가칭)다원예술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등
- 통합적 다원예술 진흥체계 수입을 위한 정보공유, 기획 조정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기획조정 등 활성화
- 다원예술 분야 기금 지원 확대

토론

〈다원예술, 그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장 지 영(국민일보 문화부 기자)

- 다원예술이란 무엇인가?
- 기존 예술현장 및 향유자(관객)층과의 소통의 필요성
- 관객과 다원예술 아티스트를 잇는 평론가의 역할
- 지역 문예회관을 이용한 다원예술의 중장기 발전 도모

최근 몇 년 간 국내 문화예술계에서 '다원예술'만큼 새롭게 부각된 용어는 없는 것 같다.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로 출범하면서 다원예술 소위가 생겼고, 지난해에는 다원예술을 전면에 내세운 '스프링웨이브페스티벌'이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에 비해 과연 다원예술이 무엇인지 속시원히 설명해 주는 경우는 한번도 없다. 다원예술이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장 예술가들을 포함해 일반인(그나마 다원예술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이미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하고 있을 만큼 다원예술의 개념은 모호하다. 실제로 다원예술과 관련된 세미나와 심포지움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대부분 다원예술의 정체성 또는 정의의 불확실성 때문에 논의가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채 제 자리를 맴도는 양상이다.

발제자도 지적한 것처럼 다원예술은 20세기 후반 현대예술에 거세게 불어닥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이후 서구의 문화와 예술, 삶과 사고를 지배해온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통일된 사조나 운동은 아니지만 그 중심적 동기는 모더니즘을 통해 수립된 고

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엄격한 구분, 예술의 각 장르간의 폐쇄성에 대한 반발이다. 또 소통이 불가능한 정치, 문화, 전문화의 영역을 깨뜨리고 삶과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술에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은 정형화된 것에 대한 반항, 보편적인 것과 대립되는 상대성과 다원성의 강조, 재현성보다는 반재현성의 중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건축을 포함해 미술, 음악 그리고 무용 등 공간예술 분야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음악이나 무용 같은 무대예술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해지며 형식보다는 기존 예술의 한계를 부수거나 다른 장르와의 혼성을 추구하는 퍼포먼스적 요소가 강해졌다. 그리고 작품의 놀이적 성격과 우연성이 중요해지고 관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됐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던 아티스트들의 작품은 모두 다원예술인가? 다원예술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다 국가마다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다원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어서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해외의 경우를 참조하면 여러 장르가 한 작품 안에 교차되는 복합장르나, 기존 장르에 동시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뉴미디어 아트,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퍼포먼스 등을 공통분모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에선 다원예술의 영어명칭인 'Interdisciplinary Arts(Inter-Arts)'나 'Multidisciplinary Arts' 대신 각각의 작품에 '연극+음악+무용' '음악+비디오+퍼포먼스'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좀더 추가하자면 문화적 종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예술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의 폭이 좀더 넓다. 예술의 새로운 표현양식으로서 형식적 실험이라는 특성과 함께 '소통을 위한 매체'로서의 다문화주의, 사회적 실천 등을 포함하는 가치적 양상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원예술이 각각의 전통적인 장르들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1990년대 예술계 혹은 장르예술과의 관계에서 비주류적 위치에 놓여 있는 대안적 예술활동, 독립예술(인디문화), 비상업적 대중문화, 소수자 문화 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쪽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다원예술이란 명칭을 비롯해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소위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그 선도적 역할을 문화운동가 또는 독립예술(인디문화) 분야의 기획자가 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예술 또는 예술에 근접한 현상들을 모두 다원예술 안에 포함시켜 지원하려다 보니 그 대상이 모호하다.

다원예술을 둘러싼 혼란을 극복하고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다원예술의 폭을 좀더 좁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로 다른 가치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틀 안에 억지로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좀더 '예술'이라는 면에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는 심사·지원·평가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원예술의 발전과 관련해 시급한 것이 기존의 예술현장 및 향유자(관객) 층과의 소통이다. 현재 다원예술을 한번이라도 접한 관객들의 반응은 극단적이다. 물론 매우 열광하는 부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이 훨씬 많다. 과거 여타 장르에서 작품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작품 제작 이전부터 존재했던데 비해 다원예술은 작품을 규정하는 기준을 아티스트 스스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 실험이야말로 현대예술의 기본이긴 하지만 기존의 장르 예술에 집착하는 국내 예술계 또는 관객들과의 접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원예술이 웰메이드 아트와 대립각을 세우는 소수자 예술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그들만의 예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떤 예술 장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지 않아 비주류에 머무른다고 해도 시간이 흐른 뒤 주류로 편입되는 사례는 예술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술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평론가다. 다원예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관객과 아티스트를 잇는 평론가의 등장이 시급하다. 현재 다원예술의 경우 전문가라고 딱히 꼬집을만한 사람이 없어서인지 이런 수준에 다다른 글이 나오지도 않고 있으며 나오더라도 평론가 개개인이 원래 기반을 둔 장르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다원예술에 대한 비평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진다.

끝으로 다원예술의 증장기 발전을 위해 지역 문예회관과 연계하는 것은 어떨까. 다원예술만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이 되어야 할 문예회관을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예회관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등의 용도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고 지원을 받아 건립한 건축물로서 공연장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을 가리킨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1지자체당 1문예회관'을 목표로 매년 7~8곳씩 개관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전국에 160여개의 문예회관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몇몇 대형 문예회관을 비롯하면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가동률이 50%가 채 안된다. 이마저 온갖 행사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다원예술 매개공간이 홍대 부근에 마련돼 있지만 아직 홍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독립예술 분야 아티스트들의 사랑방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티스트 및 기획자와의 네트워킹은 물론 효과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각 지역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토론

〈다원예술, 그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김 성 희(가네샤 프로덕션 대표)

- 다원예술 영역의 문제점
- Interdisciplinary예술을 위한 작업 환경 조성

1. 다원예술 영역의 문제점

“다원소위 혁신방안에 명시된 바 다원예술 분야는 다음과 같은 중심점을 제시한다. ①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 활동(탈장르 예술, 복합장르예술, 실험예술) ②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활동(문화다원주의, 예술 활동의 공공성) ③ 비상업적, 비주류적 예술활동(독립예술, 대안예술) 이를 바탕으로 다원예술 지원영역은 예술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실험성의 지향 가치를 추구한다.”

- 기존 다원예술에 대한 영역과 범주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함.
- 제시된 ①, ②, ③ 간에 공통분모가 크게 존재하지 않음.
- 이렇게 공통분모가 없는 예술적 가치들을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실험성이라는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함께 평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음.
- ①의 경우 이는 현대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②, ③은 public arts 와 비주류적 예술활동 영역에 포함.
- 그러므로 ①의 관점을 가진 심사위원이 ②, ③을 평가할 수 없으며, ②, ③의 관점으로 ①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함.
- 다원예술 영역 안에서의 세분화가 요구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 요구됨.

2. Interdisciplinary예술을 위한 작업 환경 조성

- 20세기 후반 실험적 다원 (Interdisciplinary) 예술의 창의적 가치 확인 및 예술적 중요성 부각. 전 세계적으로 다원(interdisciplinary)예술은 21세기를 리드할 현대 예술의 새로운 형태로 인식
- 한국은 아직 다원적(interdisciplinary) 개념의 현대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 21세기를 리드하는 이러한 현대예술의 새로운 개념과 형태를 발전시킬 국내 창작현장이 필요.
- 현대예술 전 장르간의 경계영역을 탐구하는 커팅에지 작업 지원
- 장르 상호교류적 예술활동을 시도하며 창의적 현대예술을 주도하는 젊은 작가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새로운 컨셉을 시도하는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 역동적이고 의미있는 다원예술 프로그램을 발굴 소개하는 전 세계의 예술기관과 협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 21세기 예술 개념의 새롭게 정의하며, 새로운 예술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평적 시각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현장 개발
- 탈장르 Interdisciplinary예술의 특성상 다양한 장르, 민족, 문화 등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생산되는 특성. 그러므로 레지던시 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

토론

다원예술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

김 소 연 (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 연극평론가)

- 다원예술, 혼란의 이유
- 다원예술지형도와 다원예술센터(가칭)
- 예술정책 좀더 촘촘한 그물코가 필요하다
 -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네트워킹
 - 예술정책 여타 분야와의 네트워킹
 - 예술정책 추진 단위들의 네트워킹과 조정

1. 다원예술, 혼란의 이유

○ 다원예술 영역에 대한 많은 질문들은 혼란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명명된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혹은 이 영역에 대한 개인적 혹은 어떤 집단적 욕구까지를 포함함)을 어떻게 우리 사회 예술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일 것이다.

○ 한편 다원예술에 대한 다원예술의 범주, 영역, 대상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이 영역을 기존의 장르와 같이 특정한 수단과 형식 그리고 그에서 비롯되는 미적 효과와 체험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원예술 영역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장르 체계에서 비롯된 예술형식과 예술가치를 가로지르는 일군의 예술활동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정책과 비평 모두에서 그렇다.)

○ 다원예술 영역이 정책에 기입되는 과정이 기존의 정책에서 소외된 예술영역에 대한 집합적 지원영역이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다원예술소위원회나 일련의 정책연구에서 이 영역에 대한 집합적 정의를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예술형식과 예술가치로 제한되는 데에 대한 경계 때문이다. 즉 기존의 예술규범, 예술가치, 장르와 양식, 예술수단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폭넓은 정책적 수용은 이 영역의 주요한 역할이다. 다원소위는 이 유연한 영역에 대한 정책과 현장의 합의를 위해 포럼, 연구사업, 중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 혼란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기존 예술지원체계에서 배제되는 활동에 대한 임시적 지원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2008년 다원예술분야 지원액은 총액이 14억인데 그중 2억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에 지원되었다.(마술과 새로운 예술 형식 혹은 가치가 만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2007년 문화관광연구원의 다원예술정책방향 보고서에서는 비보이 육성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비보이에 대한 주목은 새로운 예술가치에 대한 것인가 문화산업적 가치에 대한 것인가, 비보이 현장에서 다원예술이라는 영역을 요구하는가) 또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의 경우 연극, 무용, 전통예술로 그 대상이 제안되어 있다.(다원예술분야에는 전문단체는 존재한지 않는가, 다원예술은 인큐베이팅 영역인가) 비상업적 대중예술이 다원예술 영역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새로운 예술가치의 추구 때문인가 이 영역의 정책적 소외를 보완하고자 하기 때문인가.

○ 다원예술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혼란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장르체계에 수렴되지 않는 정책사업들을 '다원예술'에 편입시키는 데에 존재한다. 즉 이 영역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좀더 적극적인 예술가치의 발현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보다는 (이것이 정책에 이 영역과 이 용어가 기입될 수 있었던 예술현장의 요구일 것이다) 행정과 정책의 편의주의적 해결을 위한 영역으로 이해되고 활용하는 데에서 혼란은 비롯된다.

2. 다원예술지형도와 다원예술센터(가칭)

○ 다원예술 분야 지원사업은 개별 창작자/단체에 지원하는 정기공모가 대부분

을 차지하며 그 규모도 작다. 지원방식의 다변화, 지원금 규모의 확대 등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예술현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분야의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다원예술 분야 기획사업 정책사업에 대한 요구도 높다.

○ 포럼, 인터뷰 등에서 다원예술현장 예술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지형도이다. 다양한 분야/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다원예술 분야 예술활동의 종합적 맥락, 생성되는 예술에 대한 비평의 새로운 과제, 과정 중심 예술의 기록의 필요성 등이 정책에 대한 공통적 요구이다.

○ 다원예술 지형도는 정책의 영역에서도 시급한 과제인데 유연하고 개방적이 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다원예술 영역에서 다원예술 현황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 현장과 정책 쌍방향의 요구를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하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 다원예술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다원예술센터의 준비과정으로 추진된 다원예술매개공간의 기능과 역할- 다원예술분야 창작자 간의 소통, 창작활동의 네트워킹, 다원예술 현장과 정책단위 사이의 소통-의 보완, 심화, 확대를 통해 다원예술지형도를 그려내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술정책 좀더 촘촘한 그물코가 필요하다

○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네트워킹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에 다원예술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등에서 유사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각 사업의 구체적 영역, 사업의 목적 등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연계망 구축을 통해 다원예술 분야-특히 지원정책에서의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예술정책 여타 분야와의 네트워킹

- 다원예술은 기존 장르는 물론 대중문화(문화산업), 문화향수, 예술교육 등 예술정책 여타 분야와의 인접성이 높다. 다원예술 정책이야 말로 여타 예술정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교차점은 무엇인지 또 갈리지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각각의 정책목표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원예술이 추구하는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을 정책의 문맥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여타 분야의 정책영역과 대상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 예술정책 추진 단위들의 네트워킹과 조정

- 현재 예술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단위는 매우 다양하다.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국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중 문화예술지원금, 각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등 문화예술예산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단위와 예산들이 서로 적절하게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예술정책에서 문화부와 예술위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예술위와 지역문화재단과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지역문화재단과 지자체 문화예술과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등이 예술정책 전체의 미션 속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방식 개선을 논의하는 데에서도 예술정책의 다양한 미션들이 모두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인지 여타의 기관을 통해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 특히 여타 분야와의 인접성이 높은 다원예술분야는 예술정책 전반에서의 목표설정이 더욱 필요하다.

토론

다원 예술 인큐베이팅에 대한 부정적 시선

류한길(the manual 대표)

- 현장에서는 '인큐베이팅'을 원하기는 하는가?
- 본질적으로 비제도적인 작업들을 다시 제도적 시스템과 작동 방식에 의거하는 인큐베이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 인큐베이팅 지원 주체는 모든 제도적, 장르특정성에 의거하는 외부적 요인들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인큐베이팅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다원적 예술에 대한 논의의 자리에 참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꼭 듣게 되는 두개의 단어가 있다. 하나는 인큐베이팅 다른 하나는 자생력이다. 나는 이 두개의 단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글을 써보려고 한다.

먼저 나는 이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느낀다. 비단 나의 문제 밖에 되어주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히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도 유독 정책이나 기타 기획단체들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자꾸 생긴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의문은 현장에서는 인큐베이팅을 원하기는 하는가이다.

현재 상당수의 다원적 성향을 드러내는 창작 주체들은 어떤 면에서 자연 발생적이다. 자연 발생의 맥락에서 늘 드러나는 공통된 내용들은 롤 모델의 부재와 참조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정보의 부재 그리고 문화 예술계를 지배하는 장르 특

정적 사고관에 대한 반발의 힘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미디어 매체의 발달에 의해 장르 교육이 특권화 해놓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더 이상 권위를 발휘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인의 창작 범위는 한없이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창작 주체들 간의 실제적인 정보 공유, 네트워크와 장르 특정적 사고관에 대한 반발의 힘은 필연적이고 중요하다. 애초에 이러한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원적 예술이라는 것도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면에서도 도대체 어떤 생각 있는 비제도적 창작 주체가 다른 제도적인 주체에 의한 인큐베이팅을 필요로 한다는 말인가. 인큐베이팅은 어떻게 보면 미성숙된 존재에게 자생적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는 것은 유독 정책 문제에서일 뿐, 현장에서는 전혀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육 시스템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또 필요한가라는 회의이다. 물론 장르 특정적 사고관에 의지해서 작동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시스템이 해결하려 나서기 보다는 교육 시스템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내 입장에서 다원적 작업을 진행하는 창작 주체에게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것은 예를 들어, 목적을 가지고 콘크리트에 얼굴을 갈아 버린 후, 병원에 가서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비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들어가는 치료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지원 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왜,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하다가 콘크리트에 얼굴을 갈았고 콘크리트는 왜 그곳에 놓여 있었으며 콘크리트의 재질은 무엇이고 얼굴의 피해 정도, 치료 비용, 어디에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콘크리트에 얼굴을 갈고 나면 민망한지 안민망한지에 대한 자살하면서도 실질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공유해야 하는 의무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축적에 대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자생적 힘과 관련을 맺는다. 인큐베이팅과 자생력 확보라는 중요한 문제가 현장에서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큐베이팅이 아니어도 행동할 주체들은 행동한다는 점과 정작 자생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실질적인 의문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롤 모델도 찾을 수가 없다는데 있는 것이다.

현재의 논의와 발제를 살펴보면 느끼는 것은 '인큐베이팅'이라는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지 알 것 같은 단어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의 실질적인, 말그대로의 인큐베이팅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제도권 특히, 비예술계라고 인식되는 벤처기업에서 사용되는 의미로서의 인큐베이팅에 근거하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기획 아이디어만을 놓고 제작과 마케팅, 운용자금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현실적인 판단이 서지를 않는다. 동시에 모든 문제의 지점을 긍정하고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가정해도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주체의 경험을 믿을 수가 없다.

인큐베이팅을 주관하는 주체는 과연 제도적인가 제도적이지 않은가.

본질적으로 비제도적인 작업들을 다시 제도적 시스템과 작동 방식에 의거하는 인큐베이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인큐베이팅 지원 주체는 모든 제도적, 장르특정성에 의거하는 외부적 요인들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인큐베이팅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할 때, 그 성공적이라는 맥락은 인큐베이팅이 된 창작 주체가 원하는 성공적 결과라는 맥락과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는가의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콘크리트에 얼굴을 갈았다.'라고 할 때, 갈았다는 사실을 성과로 판단하는 지점과 갈아 버림으로서 뇌, 뼈, 피부와 감정선, 인식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생성되는 정보라는, 실질적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가치를 성과로 보는 두 개의 관점은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는 가치는 외면되고 외피적 현상만이 확대 생산되고 있는 상황 또한 다원적 예술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이후로 거기에 포함되는 영역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실질 정보라는 것은 언제나 외형적으로 하찮게 보이기 마련이라서 그 정보에 대한 제도권의 관심은 미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외의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다원예술지원의 근간을 이룬다는 나의 견해가 어느 정도 옳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요청해 보고 싶다.

이런 지속적인 논의 자체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논의의 초점이 웬지 창작과 실질적 삶을 지속이라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존재들에게는 여전히 어딘가 공허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일처럼 느껴진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하는 일인 이상, 결국 남는 얘기는 '우리가 키워줬다.' 와 '뭘 해줬다고 키워줬다고 그러는가'의 다툼들 뿐이다. 물론 현재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경험과 정보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기존 제도권 예술 시스템 안에서도 형태와 방식, 규모를 달리한 채 존재해 왔다는 점에서 웬지 모르게 불보듯 뻔한 결과만 떠오른다.

인큐베이팅의 핵심은 비제도적 창작, 기획 주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자생력의 의미는 명백하게 '자금'에 달려있다. 즉 비제도적 가치관으로 중무장한 창작 주체가 하루 세 끼 밥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금이 공격적으로 지원된다고 해도 기획과 함께 성공적으로 작동할지 안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또한 비제도적 창작 주체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제도적 시스템의 틈새를 노리거나 기생을 하거나 이중 스파이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제도적 생활 양식과 제도적 자본 시스템에 의거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당수의 평가 주체들이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 이런 식의 회의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투정 부리듯이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미 다원적 작가군에 해당한다라는 사람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간의 장르 특정적 가치관에 의한 피해의식의 총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심의지원, 인큐베이팅, 자생력 확보를 위한 도움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다원적 창작 주체들의 경계심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시점의 상황인 것 같다.